

학부제 시행상 해결 과제와 논의

홍성훈 | 건양대 교양학부 교수

1. 들어가며

대학교육은 한 나라의 발전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동력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 지식산업시대가 예견되고 있고, 미래사회의 경제, 직업, 전공 가치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실용적 요구의 충족 내지 선도라는 책무성 증대로 인하여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대학체제 운용의 틀에 대한 새로운 변화 내지는 개선이라는 직업사회 및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맞물려서 이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문제가 대학교육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교육정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정책 대안들도 이러한 맥락 안에 자리를 잡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대안 및 추진 정책 중에서 학부제의 도입 실시도 이러한 하나의 흐름을 반영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요사이엔 우리나라 대학의 개혁과 관련하여 대학 내외 구성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 제도 가운데 하나가 학부제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제는 1994년 10월 28일 교육부가 학과 통합정책을 발표하고, 1995년 3월 4일 대학 학사자율화 등 관련

교육법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와 1995년 5·31교육개혁 정책 이래 1995년부터 몇 개의 대학에서 시행되었고, 그 후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부제가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그 시행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에 따른 몇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 학부제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대학에서 학부제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교육정책당국의 권고와 재정지원정책, 고도로 세분화된 학과중심의 교육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역기능문제, 직업사회에서의 요구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1) 교육당국의 권고와 재정지원정책

교육부는 5·31교육개혁정책이래 1998년 3월 대통령령으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마련하여 1999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는 규정과, 동령 제28조 제2항의 "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은 복수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토대로 교육부는 대학에 학부제를 권고(중앙일보, 1998:70.20 자 6면; 신명철, 1998:98; 신양균, 1998:88)하거나 재정지원정책과 결부(신양균, 1998:88; 신명철, 1998:98) 시킴으로써 많은 대학이 학부제를 도입·시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세분화된 학과중심의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학 입학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보다는 성적에 의해서 학과나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을 중도에서 포기하게 하거나 재학 중 방황하여 충실한 학교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 둘째, 대학은 세분화된 학과체제를 제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전과나 복수전공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한번 자신이 결정한 학과는 졸업할 때까지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김형철, 1998 a:62). 또한 다양한 전공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김영식, 1994:21; 박준우, 1996:111)되어 있어 전공과목을 다량 이수하여 학문의 편협성과 단견을 습득하는 우를 초래하였다(정범모, 1992:51~52). 셋째, 대학은 제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학과를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내어 증파하고 학생수를 증원함으로써 백화점식으로 학과를 세분화하였다. 학과 세분화로 학과간의 폐쇄적 운영이 심화되었으며(김형철, 1998a:63), 행·재정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었다(동양대학교, 1998:23~25). 넷째, 대학원 수준에서 찾아야 할 학과를 대학에서 미리 세분화함으로써 유사학과의 초래와 더불어 학문의 중복성 및 혼란성이 제기되었으며, 이것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지나친 세부전공교육으로 인해 지식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식의 효용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김승욱, 1998:90). 다섯째,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학과간에 유사과목이 중복 편성(김형철, 1998a:62; 신명철, 1998:98)되므로서 교육과정의 비효율성도 초래되었다.

3) 직업사회의 요구

오늘날 직업사회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하나의 전공을 학습한 학생들보다는 다양한 전공을 학습한 학생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이현청 외, 1997:36)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근래 기업에서는 졸업생들이 대학에서 어떠한 전공을 배웠는가와는 무관하게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을 광역군으로 양성하는 것이 대학으로서도 졸업생의 취업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부제 시행은 교육당국의 권고, 학과중심의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 직업사회의 요구 등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고 보여진다.

3. 학부제 시행상 해결해야 할 과제

학부제 시행에 대해 대학 현장에서는 교수(중앙일보 1998년 9월 7일자)와 학생(중앙일보 1998년 9월 25일자, 조선일보 1999년 6월 2일자)들의 반대도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제 시행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 추세를 살펴보면 1997년 94개교, 1998년 전국 161개 4년제 대학(교육대학, 개방대학 제외) 가운데 121개 대학(홍성훈, 1999:4)이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학년도 신입생들 모집단위 내용을 볼 때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부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부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학부제를 시행하느냐 아니면 시행하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

제이다. 이 문제는 학부제 시행에 대한 찬반 논의로서 시행 여부와 관련된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논의를 제외하기로 한다. 둘째, 학부제 시행을 전제로 한다면 시행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학부제를 보는 관점에서부터 학부제의 구성, 시행과정 등의 관련 요인이 포함된다. 학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든 아니면 향후 시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고 반성되어야 할 것이다.

1) 학부제의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수준에서의 학부제 관련 논의와 연구과제에서 학부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부제와 관련된 용어가 모집단위, 학과통폐합, 학군제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부제의 의미와 개념을 유사용어와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부제의 편제 및 운영에 있어서 그 표현과 논의의 쟁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부제는 다양하게 구분되어 쓰여지고 있다. 첫째, 동일학문계열에서 2개 이상의 학과를 묶는 제도로 학부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개 이상의 인접 또는 유사학문 영역을 하나의 학부로 구성하고 그 밑에 둘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는 제도(김영식, 1996: 107)', '학과중심체제와 달리 2개 이상의 학과가 학문적 연계와 특성을 살려 재조합하여 운영하는 체제(이현청 외, 1997:6)'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 학부제를 유사학과 간에 학문적 학과의 통합 형태를 취하는 제도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공통적이고 통일적인 학문의 성격, 사상, 신념, 영향, 그리고 영역 등에 기초한 학문간의 통합을 의미(이득기, 1998:11)', '단일분야가 아닌 관련 학문분야를 학부라는 단위로 묶어 학문분야 상호간

의 교류를 증진하고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신양균, 1996:18)', '관련 유사학과의 통합이 아니라 관련 학문분야를 하나의 단위학부로 묶어 상호간에 학문적인 교류를 보다 긴밀히 하여 상승적인 발전을 조장하고,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가치와 철학을 강조할 수 있는 제도(백종현, 1996:99)'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 전공선택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로 학부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학과 통합의 규모나 교육편제보다는 학생들의 전공선택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학사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신양균, 1998:87)',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의 자율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교수들이 알찬 프로그램을 제시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학생 자신의 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김형철, 1998:90~91)'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교육단위의 규모를 강조하여 학부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학부제가 그 규모에 있어서는 단일학과보다 크고 인적 구성이나 커리큘럼의 선정에 있어서도 단일학과와 단과대학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이현청 외, 1997:6)' '교육행정의 단위로서 기존의 학과보다는 크고 대학보다는 작은 교육편제(동아일보 1998년 6월 20일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다섯째, 단과대학 차원에서 그 속에 속한 학과 모두를 학부의 형태로 취하는 제도로 학부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학생소속이 기존의 좁은 의미의 학과나 중간 크기의 학부가 아니라 단과대학 수준의 학부라는 의미(김남두, 서울대 교수협의회보, 1995년 10월 20호)' 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이다.

2) 학부제 시행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가 필요하다

대학은 학부제를 어떠한 시행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학부제를 도입 실시하였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혹시 많은 대학들이 타 대학 또는 서구 모형을 일방적으로 모방하거나 학부 이름을 적당히 작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시도함으로써, 학부제 본래의 취지가 약화 내지 혼돈현상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학부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 시행계획 및 합의도출, 통폐합에 대한 증거설정 등의 과정과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학부제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모든 대학이 학사과정을 학부제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점', '대학원 교육을 내실화 할 수 없는 대학이거나 학부과정에 치중하는 「학사과정형」 대학에서는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학부제가 경쟁논리 내지 자본논리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점', '학과통합=학부제라는 도식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학부제를 위로부터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 '학부제가 학과체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 '지나친 세부전공화 현상과 백화점식 과다학과 설치의 폐단을 보완하는 대안이라는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학부제 시행계획 및 합의도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부제 시행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 대학의 특성에 따라 대학 및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대학구성원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학부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해 대학구성원 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효율성과 영속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제의 타당성과 장점을 해당학과의 구성원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설득해야 하고, 학과 통폐합 방안에 대한 공개적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적극 권장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의 해결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문의 성격상

독자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학과 통폐합을 위한 학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학과로서의 특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학과통폐합의 준거가 설정·제시되어야 한다. 학과통폐합의 준거는 학부제 시행을 위해서 기존의 학과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로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있어서 통폐합의 기준을 의미한다. 학과통폐합의 준거설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접 유사학과 간의 통합에 의한 세 영역화와 경쟁력 창출, 학문 이론의 변화 추세, 산업사회의 변화 추세와 동향, 시대적·사회적 요구 등이 통폐합의 준거설정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학사 운영체제를 개편하여야 한다

학부제 시행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부제와 관련된 운영체제의 개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생모집시의 선택권 보장', '복수전공, 복합전공, 연계전공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최소전공인정학점의 제도화', '학사일정 및 졸업학점수 조정', '전공분야 선택시 우선적으로 학생 의사 존중', '다학기제도의 도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거나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선택을 입학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입학한 후 다양한 영역에 대해 학습한 후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기 전공과 비인기 전공의 학생 규모 기준이 성적에 의해서 설정되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학부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상 학과체제와는 달리 교육편

제 및 교육과정, 내용 등이 개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대학별로 특성에 맞는 분야의 교육과정 개편과 개혁(학부의 현실에 맞는 교육목표 설정과 이에 걸맞은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개편), 커리큘럼의 합리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최소 전공학점이수의 하향 조정과 필수과목의 축소, 다전공제를 활용하여 제 2, 3 전공의 적극적인 유도 및 보장, 전과·전학 허용범위 확대 및 활성화 도모,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 구체적인 교과목 조정의 병행, 최소 수강인원 하향 조정(폐강 기준 완화, 교육내용과 학점관리의 엄격성, 소규모 클래스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강 지도 및 교과목·전공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효율적인 강의시간 편성 및 편중되는 전공의 교수 충원, 특정과목에 대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강의 등 교육매체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교수의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 학부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수가 신변의 불안감을 갖고 있거나 향후 교수 자신이 소속한 학과의 존폐 등과 관련되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교수의 신분보장은 학부제를 실시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교수의 신분보장에 대한 관련 내용을 보면, 교수의 책임시수 경감, 전공교수의 신분 보장, 다양한 역할의 교수 방안(연구교수제, 강의교수제 등의 방안), 교수의 연수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학과 통폐합에 의한 학부제 운영에 따라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교수가 많아질 것이므로 전공담당 윤번제, 선택과목 윤번제, 다학문적 접근의 경우 Chapter교수제, 연구교수제와 강의교수제 등의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인기 학과 및 전공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비인기 학과 및 전공에 대한 대책은 학부제 시행으로 인해서 인기 전공과 비인기 전공간의 격차 및 그 구성원간의 위화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인기 전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 비인기 학과의 문제를 보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완장치 개발, 비인기 전공의 육성 및 인기 전공과의 학생수요 불균형 해소, 강좌의 폐강 기준 조정 적용, 각 전공에 대한 수용 한계선 설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인기 전공과 비인기 전공은 구별될 것이고 정작 주장되고 있는 내용들 역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학생지도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전공선택, 성적평가의 엄정성, 학생들의 자치활동 지도 등을 통해 전통적인 학과로부터 이탈한 학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애착, 공동체의식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담 지도교수제도의 활용, 학부제 동아리활동 장려, 학생지도체제의 조정 및 강화, 엄격한 학사관리와 성적평가, 학생활동에 대한 지원 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관리운영체제 및 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관리운영체제가 학부제에 걸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학부중심의 행정체제 개편', '교수와 조교, 행정직원의 추가 배정시 우선권 부여', '대형 학부에 행정요원 증원 및 학부장의 강의 책임 시간 감소'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체제에 알맞는 학사규정과 시설·설비관련 내용들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 운영규정과 계절학기 운영규정 제정', '전과 및 전공 변경의 실질적 허용을 위한 학칙 및 관련규정 개정', '공간 조정 및 재배치', '공간 및 기자재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부제 시행에 있어서 복수전공 이수규정, 전학부(학과)에 관한 규정,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재수강에 관한 규정, 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제·개정이 학부체제에 알맞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맺는 말

학부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해결되거나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학부제의 시행과 정착·확대를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이 요청된다. 학부제는 우리 나라 대학의 변화 흐름 가운데 하나이므로 정부당국이나 연관 연구기관 등에서 학부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학부제의 개념, 장·단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정리,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 학사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당국의 정책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제를 시행하는 개별 대학에서도 학부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대학은 학부제 시행을 단시일 내에 성사시켜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성공적으로 학부제를 시행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대학의 사례를 모방하거나 획일적으로 학부제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부제를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제 조직과 운영은 해당 대학의 특성이나 규모, 교육목표에 따라 하나의 형태를 취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하고 이는 대학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학부의 구성은 전공분야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교수나 학생 특히 학생들의 요구가 있는 복합학문을 어떻게 구성 및 조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부제 추진으로 인한 통합협 대상학과는 학문 및 교육과정의 유사성이나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과정의 개편 없이는 정상적으로 학부제가 시행될 수 없으므로 교육과정을 학부제 체제에 적합하게 개편하여야 한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커리큘럼을 개편·조

정하고, 하나의 학부제 안에서도 교수들의 공동 및 협동 교수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문계열에 속하는 교수들의 책임 강의 시간을 감축하거나 학부의 특성에 따라 부전공, 복수전공, 최소전공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야 한다.

일곱째, 학부제로 인해 과거의 학과체제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의 학생들의 연대의식 및 공동체의식이 약화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할 수 있도록 분담 지도교수제와 학부제 지도교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학부제는 모든 대학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대학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대학의 규모, 대학의 지리적 여건, 학문의 성격, 교양교육과 전문지식 및 기술의 습득, 각 대학의 특성, 사회와 기업체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알맞은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학부제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보다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개별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내용과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부제의 성공여부는 학생들의 전공선택 기회 확대와 학제간의 원활한 교류라고 볼 때 학부제하에서의 학사운영체제와 교육과정의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개편 내용은 기존의 학과체제에서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새롭게 교육이 전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대학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부제의 개념, 학부제 유형의 분석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보다 각 영역별로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김남두(1995. 10), 『교수협의회보』, 20호, 서울대.

김승옥(1998), 『학부제 시행과 문제점』, 『대학지성』, 8호, 한국대학총장협회.

- 김영식(1994), "학과통합과 학부제", 『교육진흥』, 26호.
- 김영식(1996), "학부제 도입과 대학개혁", 『대학지성』, 4호.
- 김형철(1998), "학부제의 이상과 현실", 『대학교육』, 91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형철(1998a), "효율적인 학부제 운영 방안", 『대학교육』, 96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동양대학교(1998), "교육개혁 이대로는 안된다, 대학정원 자동화와 편입학제도의 문제점", 신학문사.
- 박준우(1996), "학부제 시행의 문제점과 보완 방향", 『대학지성』, 4호.
- 백종현(1996), "학부제의 특징과 현실적 타당성", 『대학교육』, 81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명철(1998),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학부제", 『대학교육』, 91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양균(1996), "학부제의 현상과 전망", 『대학교육』, 79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양균(1998), "학부제를 다시 생각한다", 『대학교육』, 91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득기(1998), "대학 학부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행정학 분과연구회 발표자료.
- 이현청 외(1997), "대학 학부제의 과제와 전망, 대학학부제 개선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정범모(1992), "대학교육과정의 재검토", 『대학교육』, 55호.
- 중앙일보, 1998년 7월 20일자, 9월 7일자, 9월 25일자.
- 홍성훈(1999), 『한국 대학의 학부제 형성과정』, 형설출판사.

홍성훈

중앙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박사(교육행정 전공)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양대 교수로 재직중이고, 교직전공 주임과 사회교육부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대학의 학부제 형성과정』이 있고, 논문으로 "한국 대학의 장학금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대학의 학부제 형성에 관한 기초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